

# 입법정보

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 
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

04

2026



# 목차

## 01

### 법령 제정·개정 동향

- 1.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일부개정) 01
- 2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02
- 3.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 03

## 02

### 다른 시·도 조례 입법동향

- 1.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4
-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05
- 3.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06

## 03

###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

- 1.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임금 대위변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(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) 07
- 2.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정책 및 센터 운영 사무의 자치사무 해당 여부 (경기도 성남시) 08
- 3.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범위 확대(본인 상해 보장 포함) 조례 규정 가능 여부 (울산광역시 중구) 09

## 04

### 국외 입법례

-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도입 입법례 10



##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시행 2026. 4. 21. | 법률 제21558호, 2026. 4. 21. | 일부개정

### 개정이유

-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, 연구개발, 신재생에너지,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, 교육·출입국·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,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.
-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기준 완화 및 기술료 감면 등 산업·연구개발 분야 특례를 도입함.
- 외국인 체류·정주 관련 출입국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·연구기관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원함.
-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, 공동급식센터 운영,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분야 특례를 확대함.
- 민·관·군 협력체계 구축, 폐광지역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, 관광·문화·의료·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신설함.



## 2

#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시행 2026. 4. 2. | 법률 제20880호, 2025. 4. 1. | 일부개정

## 개정이유

-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서비스 수행체계 및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·운영·지출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도입함. 또한 이용 절차, 대상 재산의 범위, 계약 내용, 비용 부담 및 종료 절차 등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.
-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까지 확대하고, 시·군·구 단위 설치 및 지역 여건에 따른 통합 설치와 비용 공동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함.



## 3

#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

시행 2026. 4. 3. | 법률 제21164호, 2025. 12. 2. | 일부개정

## 개정이유

- 건축물 분양 시 설계변경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,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양정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 비율(5분의 4 이상 및 전용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)의 동의를 받도록 함.
-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중 변경으로 인해 당초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함.
-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·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분양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건축물 분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.



1

#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시행 2026. 4. 3. | 충청북도조례 제5559호, 2026. 4. 3. | 제정

## 제정이유

- 청년의 취업난,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 청년정책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,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·운용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을 설치하고, 출연금·전입금·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함.
- 기금은 주거, 일자리, 교육, 복지 등 청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며, 도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.
-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.
- 기금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별도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.
-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.

##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년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## 시·도별 현황

- 제주특별자치도, 서울특별시 도봉구,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



### 2

#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

시행 2026. 4. 9. |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682호, 2026. 4. 9. | 제정

## 제정이유

-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·이용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목표 및 교육·홍보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.
- 인공지능 정책 및 윤리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, 교육, 위험관리 및 영향평가, 행정서비스 개선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.
- 중앙정부, 지자체, 기업,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윤리 확산을 도모하도록 함.

## 관계법령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

## 시·도별 현황

- 경기도, 경상북도, 서울특별시 등



3

###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시행 2026. 4. 20. | 경상북도조례 제5480호, 2026. 4. 20. | 제정

#### 제정이유

- 정보통신기술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생산성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,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·시행과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·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.
-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목표·추진전략·데이터 활용·기반시설 보급 및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.
-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, 기자재 보급, 데이터 활용 경영 개선, 교육·컨설팅 및 시범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해 축산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고, 홍보, 전담 인력·조직 운영, 사무 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.

#### 관계법령

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# 시·도별 현황

- 경기도



##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임금 대위변제 조례 규정 가능 여부

[의견26-0102]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### 질의요지

-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?
- 임금 이종지급 피해가 발생한 고용주에게 보조금 또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?

### 의견

-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며, 임금채권 및 변제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「임금채권보장법」 등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영역이므로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는 새로운 권리·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려움.
- 또한 고용주의 임금 이종지급 피해에 대해 보조금이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「지방재정법」 상 공금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, 해당 손해는 사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지원 근거로 인정되기 곤란함.
- 따라서 체불임금 대위변제나 손실보전 성격의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

## 2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정책 및 센터 운영 사무의 자치사무 해당 여부

[의견26-0092] 경기도 성남시

### 질의요지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, 법률상담 연계, 학습권 회복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 등을 포함한 회복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학교폭력 회복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·운영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?

### 의견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·정서·학습·법률 지원 등 회복지원 정책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·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며, 정책적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.
- 다만 학교폭력 조사·상담, 치유프로그램 운영, 전문기관 설치·운영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교육·학예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, 조례 제정 시 기능 중복이나 권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기존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

3

##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범위 확대(본인 상해 보장 포함) 조례 규정 가능 여부

[의견26-0108] 울산광역시 중구

### 질의요지

-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시, 기존 배상책임보험 외에 본인 상해 보장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?
- 불가능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

### 의견

-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및 지원은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정 가능하나, 현행 조례상 보장범위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한정됨.
- 책임보험(제3자 피해 보상)과 상해보험(본인 피해 보상)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보험으로,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해보장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. 따라서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보장까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에 보장내용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 하도록 개정이 필요함.
- 아울러 보험료 지원은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조례에 직접적인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, 향후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구체적 보장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

#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도입 입법례

국회도서관 | 최신외국입법정보 | 2026-7호 | 2026. 4. 21.

- EU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「에코디자인 규정」을 제정하고,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(DPP)을 도입함. DPP는 제품의 생산·유통·판매·사용·재활용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·저장·공유하는 제도로, 제품의 환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.
- DPP는 QR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, 제품·사업자 단위의 고유 식별자와 디지털 등록체계를 기반으로 정보를 통합 관리함. 제조업자, 수입업자,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에게 정보 제공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제품의 내구성, 수리 가능성, 탄소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추적성과 관리 수준을 강화함. 또한 제품 정보의 공유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·감독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됨.
-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는 주로 폐기·재활용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, EU의 DPP는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와 환경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제도 도입 시 제품 생애주기 기반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입법적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.

## 입법정보란?

법령 제정·개정 동향, 다른 시·도 조례 입법동향,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,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
## 법령 입법예고 사항 확인

- 법제처 | <https://bit.ly/4tPEaBq>
- 국민참여입법센터 | <https://bit.ly/46kTUCr>

문의 |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☎ 033-249-5707